

김관영 “메타버스 산업 새 미래먹거리로 육성”

〈민주 도지사 후보〉

LX 찾아 사업추진상황 등 검토 “디지털 국토정보, 미래성장동력 가능성”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12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를 방문, 메타버스(metaverse)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LX관계자와 함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검토했으며, 관련 사업과 전북도 발전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LX는 전주시 디지털트윈 표준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도로·철도·지하·분야의 품질관리로 안전한 국토관리에 힘쓰고 있다”면서 “디지털 국토정보를 활용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전북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LX는 2020년 지하수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하수전통합지도 제작 및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답기 구로 지정됐다”면서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및 생신정보 구축,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하정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사진 오른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보시업에 대한 역할 확대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국토정보는 메타버스,”

ICT산업과 융합돼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전주와 익산에 걸쳐 있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은 전북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천마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2일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살피며 그동안 성과와 발전 전략을 직접 확인했다. 송 지사의 이날 무주 방문은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3단계’가 추진되고 있어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품격있는 김제 만들 것”

김종희 전 의원, 민주 탈당 김제시장 출마 선언

“정호영 전 예비후보도 탈당 날 돌기로 했다”



김종희 전 국회의원이 12일 “품격있는 김제를 만들겠다”며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20대 국회의원(김제·부안)을 지냈으며, 지난해 말 대선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은 대표 공약으로 ▲김제시 예산 2조원 시대, ▲임기 내 전북도청사 김제 이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한 뒤 김제시장직에 출마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흐름하는 분도 계신다”며 “원칙과 공정이 사라진 지금 정치 현실에 양식 있는 정치인의 한시름으로 좌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출마의 변을 가렸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지역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품격있는 김제시를 만들리는 시민들의 지상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표 공약으로 ▲김제시 예산 2조원 시대, ▲임기 내 전북도청사 김제 이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소상공 지역경제분야, 농축어업 복지, 문화관광, 소통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후 세부공약을 발표하겠다”며 “의숙을 꼭 지키는 김종희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덧붙여, “민주당 김제

시장 후보경선에 나섰으나 패배한 정호영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저를 돋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당을 박차고 나갔다”며 “김제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호상 기자

“尹 정부 초대 내각, 사익추구형 모음집”

신영대 의원, 산자부장관 후보자에 혈세유학·사외이사 등

증기부장관 후보자에 이해충돌·백지신탁·스펙업 지적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11일 종소 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근로자의 이사직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스

특유선 비과세 핸드로는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작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테르렌(Non-Disclosure Agreement)은 스톡옵션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테르렌 운영 실태를 보면 기업에 대한 애착보다 여성, 벤처, 창업이라는 이력을 통해 외부활동을 하면서 정치입문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증기부 장관 자리를 개인의 도약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국회 입성 이후,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피켓기관에 테르렌 제작이 남았던 것과 동시에 2018년부터 테르렌의 매출이 감소했는데 2021년부터 매출이 2배 뛴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문제를 지적하고 ▲후보자의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자의 길로 들어선 순간(백지신탁 등에 대해) 결단을 했어야 한다”며 “공직을 수행할지, 벤처사업가로서 국가에 경제적 기여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라고 이영 후보자를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이 칭양 후보자의 혈세유학, 자녀 무상유학, 사외이사, 관시네트워크와 이영 후보자의 이해충돌, 백지신탁 문제를 볼 때 공직에 오고자 사익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일갈하며 “시익추구에 만 물두었던 두 후보자가 국무위원으

로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창업정신을 강조했던 이정양 후보 카이스트 교수사절 청업 관련 자문·연구가 전무했던 점, ▲이 칭양 후보자가 법적 근거없는 산업부장관 경제지문관 활동으로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 ▲이영 후보자가 과거에 경영한 기업 테르렌이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와 대량 계약을 수주한 점 등을 언론에 단독 보도하며, 주목을 받았다. /유호상 기자

김수홍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주경호 후보자에게 기회특구 도입과 관련된 주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와 협력해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양도세, 상속세 감면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지막으로 김수홍 의원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향후 윤석열 정부의 기회특구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익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스티항공 청업주인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티항공 주식을 떨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티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는 480억원의 순혜를 회사에 기관 협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공직의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공직을 떠나서는 사외이사 자문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자기 이익을 취했다”며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나”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임부 장관의 자리가 후보자인 또 다른 스펙업을 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장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장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밝혔다.

그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공직의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공직을 떠나서는 사외이사 자문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자기 이익을 취했다”며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나”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임부 장관의 자리가 후보자인 또 다른 스펙업을 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장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밝혔다.

그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공직의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공직을 떠나서는 사외이사 자문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자기 이익을 취했다”며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나”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임부 장관의 자리가 후보자인 또 다른 스펙업을 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장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밝혔다.

그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공직의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공직을 떠나서는 사외이사 자문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자기 이익을 취했다”며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나”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임부 장관의 자리가 후보자인 또 다른 스펙업을 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장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밝혔다.

그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공직의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고 공직을 떠나서는 사외이사 자문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자기 이익을 취했다”며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나”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임부 장관의 자리가 후보자인 또 다른 스펙업을 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장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밝혔다.

그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